

경제성장과 부패는 역상관관계가 있는가?—이론적 실증적 검토

Are There Negative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김진영(Kim, Jin Young)*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on the economic costs of corruption, more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 of corruption on growth. It is a usual belief that corruption is harmful to economic growth. Especially in the circ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and World Bank, they think corruption is one of the main obstacles to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o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y have estimate that the cost of corruption values more than 5% of global GDP. Thus corruption is not simply ethical and legal but also a direct economic problem.

We have reviewed models why corruption occurs and how it affect economic growth. Rent seeking and principal agent models are typical explanations on corruption and corruption can either deter or promote economic growth. There are many channels such as investments and governance system through which corruption influence on growth. Many empirical researches have found the invers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growth, but the findings are not robust not only because of data used in the studies but also because of various biases. To address the question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firmly, we need to develop more suitable models and proper data to test.

Key words: Corruption, Rent Seeking, Principal Agent Model, Economic Growth, Investment

I. 문제의 제기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존해 왔고 또 선진국이나 후진국,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와 관련 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새로운 국가 주석이 된 시진핑(習近平)은 집권하면서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반부패의 칼을 뽑아 들었다. 중국에서 관료들의 부패는 정권의 안정을 위협할 만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고위 관료들과의 불륜행각을 폭로한 ‘불륜녀 3인방’이 비난받기는커녕 오히려 반부패의 공신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13년 6월 20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2012년 12월 4일자)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이 우간다(Uganda)에 만연한 부패를 이유로 3억 달러의 원조를 전면 동결하였다는 기사를 실었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경제학 박사

다. 같은 해 10월 우간다의 감사원은 총리실이 1천 5백만 달러의 원조자금을 잘못 사용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정부는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기로 하였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우간다는 국제 투명성 기구의 투명성 지표에 따르면 183개 국가 가운데 143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패가 심한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관료들과 기업과 관련된 부패 현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12년에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기관의 부도덕한 행위와 이를 감시감독 해야 할 정부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감독기능을 맡은 정부기구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2013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불량부품 납품에 따른 발전소의 가동중지는 발전소 직원들과 납품업자의 유착에 따른 부패가 그 원인이었다.

부패에 따른 비용은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손실로 나타나거나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경우 부패로 이득을 보는 당사자도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와 같이 부패는 선진국이나 후진국 그리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패는 심각하면 사회공동체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도 하고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심각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패는 사회적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방지나 척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부패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의 비용이 무엇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데 부패의 비용은 유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된 이익이나 사회적 신뢰 같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기업들이 정부구매를 얻거나 기업의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뇌물의 크기가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은 보고 있다.(세계은행, 2004) 다른 사회적 비용을 제외하고 순전히 기업들이 지불하는 뇌물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부패와 관련된 전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엄청난 크기가 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부패의 궁극적인 비용은 결국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패의 경제적 효과 특히 경제성장 혹은 경제발전과 관련한 연구는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개발도상국 원조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으로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발전에 관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연구 축적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비단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부패로 인한 경기침체나 낮은 경제성장률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분석과 실증적인 분석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부패를 규제하거나 억제하려는 이유의 첫 번째는 부패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부패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패 규제의 두 번째 이유는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혹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비용은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의 감소, 투자위축, 국제무역의 불안정이나 가격 불안정, 생산성 하락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부패가 심각한 정부나 체제는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해치고 심지어는 사회의 해체에 이른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었다. 부패가 국가나 정부의 위기나 붕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실업률이 높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에서의 부패는 정부불신 정치 불안 그리고 범죄의 만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Atuobi 2007)

이 글의 제일 관심사는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이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가설과 반대로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II 장에서는 부패의 유형과 일반적인 부패 발생의 기전(mechanism)에 대해서 알아본다. III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실증분석을 요구하는데 실증분석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인 모형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IV 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의 결과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부패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의 한계를 모형의 문제점과 데이터의 한계 그리고 기타 요인별로 알아본다. 연구의 요약 및 제언이 마지막 장에 제시된다.

II. 부패 발생 기전과 부패 규제의 논리

1. 부패 정의와 유형

부패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는 행위를 부패로 보기도 하는데 법학에서는 법규범에서 벗어난 공무원의 행동을 그리고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모두 부패로 보고 있다.(Nuijten and Anders, 2007) 그러나 OECD에서는 간단히 부패를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의 지위나 권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the abuse of public or private office for personal gain)으로 정의한다. 이에 비해서 세계은행은 ‘공적인 권력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을 부패로 정의한다.

공적 권력은 흔히 말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위나 권력으로 볼 수도 있고 개인이 아닌 회사나 사회단체까지를 공적 권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공적권력은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에서의 역할이나 지위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 추구 역시 부패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 (Ackerman, 2007)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를 포함한 국가 기관의 힘을 잘못 사용한 것만을 부패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이다. 즉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나 조직 혹은 기관의 힘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을 부패라 부르기도 하는데 좁게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혹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

경제성장 메커니즘은 미시적인 요인 보다는 국가 전체의 정책과 관련된 거시적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좁은 의미의 부패 혹은 공무원의 부패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만 부패로 간주하더라도 그 범위가 결코 좁지 않을 수 있다.

부패를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한 정의이지만 사적인 이익을 금전적 물질적인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비작위적 행위로 인한 효용의 증가까지로 포함하면 부패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 즉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편안함을 부패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면 부패의 범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부패에 관심이 많은 세계은행은 부패의 학문적인 정의를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부패의 사례를 열거하기도 한다. 세계은행은 뇌물(bribery)을 부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데 뇌물을 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특혜를 얻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보고 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들은 뇌물을 이용하여 정부계약(government contracts)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주는 편익(government benefit) 즉 보조금이나 금융지원 그리고 정부 시설의 이용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뇌물을 통하여 조세 특혜(lower tax)를 받을 수도 있다.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조세를 감면 받거나 조세관련 불법행위를 눈감아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처벌을 약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관리하는 자격이나 면허(license and permit)의 발급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정부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 시기(time)를 조절하여 뇌물 제공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뇌물과 더불어서 절도(theft)를 부패의 중요한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작게는 정부 물품을 훔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크게는 정부소유 자산을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세계은행, 1997)

뇌물은 주로 민간인이 정부 관료를 움직이기 위하여 지불하는 것인데 비해서 절도, 횡령(embezzlement), 기만(fraud), 배임(extortion), 그리고 특혜나 정실인사(favouritism and nepotism)와 같은 유형들은 민간인의 개입 없이 공무원이 스스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orruption on the Agenda,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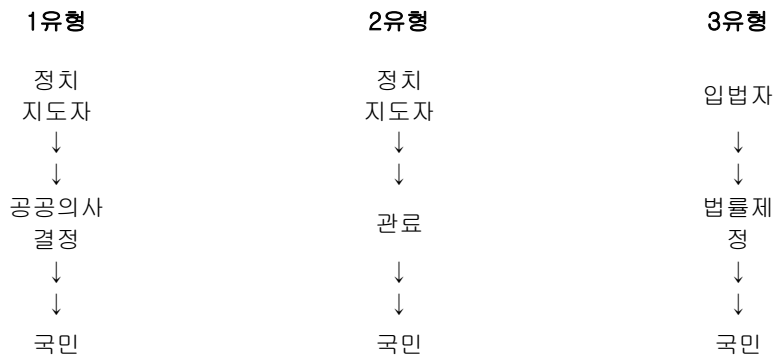
부패의 정의를 넓게 하든 혹은 좁게 하든 우리 연구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민간의 뇌물이나 향응에 반응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이다.

2. 부패 발생 기전

부패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비교적 새로운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부패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매우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패의 발생논리나 부패 발생의 정도를 설명하는 분야가 매우 인기 있다.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부패는 관료나 정치인 혹은 입법을 담당한 사람들의 도덕의 문턱이 낮거나 탐욕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지만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적 제도 혹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결합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인(Jain, 2001, p78)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패 발생 경로

경제학에서 흔히 가정하는 선한정부(benevolent government)의 논리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나 입법자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정책, 입법,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정부라 하더라도 정치인이나 관료가 선하다는 보장은 없다.

부패한 정치 지도자나 입법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부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나 개인이 정부에 속하는 정치인 입법자 그리고 관료에게 로비를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부의 관리들이 민간에게 불법적인 뇌물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부패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로 부패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과 정보의 비대칭성 현상에서 발생하는 본인-대리인모형(principal agent

model)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대추구 행위는 경제 주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지대추구 행위가 일반적인 경제행위와 구분되는 점은 후자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나 부를 창조하는 데 비해서 전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치의 배분에만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전형적인 보기로는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이윤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들 수 있다. 경제학자 바그와티(Bhagwati, 1982)는 기업이 로비활동을 통해서 시장개방을 막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행위를 지대추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비생산적 이윤추구(DUP, directly unproductive profit seeking)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뇌물이나 로비를 통하여 규제자를 움직여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지대추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기업이나 민간의 로비(lobby)에 정치인이나 관료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시행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줄 수 있다. 지대(rent)의 원래 의미는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이지만 지대추구 이론에서의 지대는 토지와 상관없이 독점적인 요소의 보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 때 독점적인 지위의 확보는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의 전형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규제, 법률 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지대추구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Tullock 1967, Krueger 1974)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에 로비를 하여 수입관세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관세를 높이려는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부를 움직여서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제한하여 이윤을 올리는 것이 때에 따라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정부에 대한 로비를 비교하여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수입제한 정책은 국내 기업들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허용하게 되고 그 결과 기업들은 경쟁시장에서 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지대추구이론은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지대를 발생시키고 개인들은 이런 지대를 추구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지대추구 행위는 합법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경우 뇌물이나 밀수 그리고 암시장(black market)과 같은 불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지대추구 행위가 반드시 낭비적인 현상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즉 현재의 정치상황이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상황이 아닐 때는 지대추구를 위한 경쟁 행위가 최선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회적 후생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Pasour, 2002) 즉 이미 정부 실패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대추구 행위가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지대추구 행위는 정치인 관료 혹은 기업이 자신들의 행위 결과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의 충돌에서 공적인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앞세운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본인과 대리인의 정보비대칭 때문에 대리인의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에서 본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을 고용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활동해 주기를 원하지만 본인은 대리인이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나 수준의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즉 대리인은 자신의 활동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 비해서 본인은 대리인의 활동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있을 때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 활동을 위임받은 관료,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모두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부패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합리적 선택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본인-대리인 모형에서 관료나 정치인들은 부패한 행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이득이 정직하게 행동할 때의 이득보다 커다면 부패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rational)인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리인인 정치인에게 본인이 되는 국민의 감시가 느슨할 때 그리고 대리인인 관료들에게 본인이 되는 정치인의 감시가 느슨할 때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은 대리인의 부패한 행동 혹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기 위하여 감시자를 고용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incentive system)를 도입할 수도 있다.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지대추구라면 기업이나 개인이 정치인이나 관료의 행동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물이나 로비가 필요하지만 부패 발생의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라면 반드시 기업이나 개인의 로비가 필요 없이 관료 스스로가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대추구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관료와 뇌물 제공자가 빼앗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비해서 본인-대리인 모형에서는 관료나 정치인의 부패가 명시적인 뇌물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묵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III. 부패와 경제성장

1. 부패와 경제성장의 이론적 관계

부패 연구의 궁극적 도달점은 부패의 비용 혹은 부패의 경제적 효과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패가 경제발전 혹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부패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그것이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불법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정적 효과 즉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

다. 그렇다면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먼저 확인 되어야 한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성장 모형을 규정하고 모형에 부패행태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정한 후에 어떤 부패가 그런 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제성장 모형은 솔로우(Solow)의 성장모형으로 생산함수를 통하여 생산요소들의 기여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Y = Af(K, L, E)$$

여기서 Y: 총생산량 A: 기술 K: 자본 L: 노동 E: 기타 요인들을 나타낸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기술이나 생산요소의 변화를 통하여 총생산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부패는 기술 자본 노동 그리고 기타 요인의 축적이나 증가 속도나 증가량을 변화시켜서 경제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한다. 경제성장과 부패의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들은 개략적인 묘사에 그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생산함수를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패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 원조와 관련한 연구들이 시초라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부패가 개발도상국 원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원조가 부패를 심화시켜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OECD도 개발도상국이 국가 주도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가 부패를 조장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반부패를 위한 원조국의 원칙’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 수원국의 반부패 활동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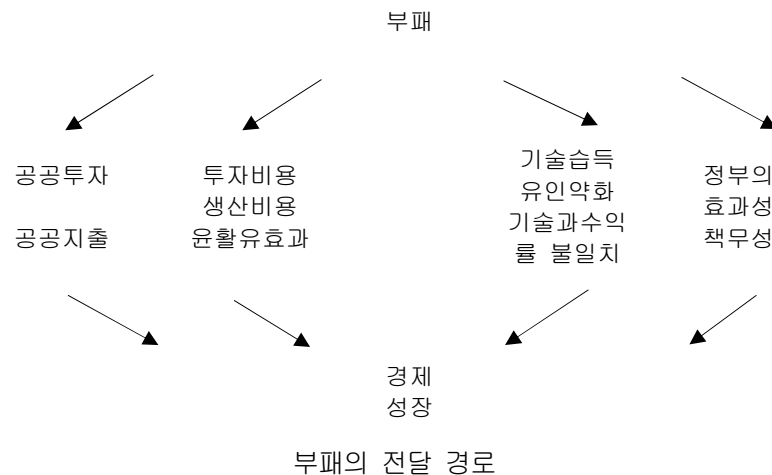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도상국 원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보다 먼저 개발도상국의 반부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은행이 부패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부패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교육이나 보건 투자는 물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 경제발전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인데 부패로 인해서 사회간접자본 형성이 크게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조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선진국에서도 경제성장은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국들도 일반적인 믿음대로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장 정책 못지않게 부패방지에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나 중진국의 입장에서든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련하여 투자국(source country)이나 투자 대상국(host country)의 부패 정도에 따라 FDI가 크게 달

라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Ali and MacDonald 2010)

2.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 전달 경로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큰 진척이 있었지만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전달 경로를 분명히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Ugur and Dasgupta(2011)는 부패의 전달경로로 공공지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인적자본형성 그리고 통치의 질을 들고 있다.



* Ugur and Dasgupta(2011)의 p21의 표를 재구성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 경로는 매우 다양한데, 부패는 공공과 민간 투자의 양과 질, 기술습득, 정부지출의 대상 그리고 정부의 책무성을 변경시켜서 경제성장을 방해 할 수도 있고 순환유 효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 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조장할 수도 있다.

1) 부패와 정치 제도적 불안정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면 어떤 전달경로(channel)를 통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이 부패가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경직된 중앙 집권화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같이 경직된 체제는 그 자체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기 때문

에 이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부패는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부패는 제도적 장치의 질(institutional quality), 정치적 불안정(political instability), 정치의 질(quality of governance)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특히 Pak(2007)은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효과의 절반이상이 정치적 불안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머지는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Eatzaz(2012)도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다만 부패의 정도가 높은 곳에서는 부패를 낮추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오히려 부패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비선형(non-linear)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즉 부패가 많아도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지만 너무 깨끗해도 역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정치의 질이나 정치적 불안정은 특별히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부패와 정치의 관계는 제도에 나타나지 않은 국민들의 정치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부패와 투자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중간 매개물로 투자를 들고 있다. 모든 종류의 투자 즉 정부의 공공투자, 기업의 투자, 외국인의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 모두 부패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이론은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투자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투자를 통한 자본량의 증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는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이론이 제시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검증되지는 않는다. 실증 연구들은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투자자금의 조달방법 투자의 효율성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Semenescu 등, 2007)

따라서 부패가 투자를 방해하여 경제성장을 낮춘다면 그 전달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부패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가 동시에 규명되어야 한다. 우선 부패가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 역시 투자의 크기 투자의 종류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패가 투자를 방해한다는 논리는 부패는 정상적인 기업의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기업은 아무런 편익을 얻지 못하면서 정치인이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영업하는 것 보다 비용을 높이고 경쟁력을 낮춘다. 지대추구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

상 비용 절감에 투자해야할 자금을 뇌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연히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편 부패로 인하여 정부예산이 적절한 곳에 제대로 지출되지 못하고 정치인이나 관료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공투자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분야의 선구적 실증 연구는 Mauro(1995)의 부패와 경제성장 논문이라 할 수 있는데 Mauro는 부패가 있으면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의 투자 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국가들의 횡단분석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그러나 Mauro와 달리 Tanzi and Davoodi(1998)는 부패가 민간 투자가 아니라 공공 투자를 방해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Tanzi 와 Davoodi는 부패가 공공투자를 지나치게 방만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로 댐 관개시설 발전소 항구 학교 병원과 같은 대형 공공프로젝트 기공식을 통해서 얼굴 알리는 것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공공 투자를 지지한다. 공공지출 중에서 사회보장비나 공공서비스 구입을 위한 소비적 지출에 비해서 공공투자 지출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얼굴 알리기 나 업적주의 때문에 공공투자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더구나 늘어난 공공 투자가 뇌물로 인해서 사회적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패가 공공투자를 과도하게 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패로 인하여 과도한 공공 투자와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부패와 공공투자의 관계를 규명한 실증연구들에서는 부패가 공공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들은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Lutz and Ndikumana, 2008)

Podobnik et. al.(2007)은 부패와 경제성장을 위한 실증연구에서 FDI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예외 없이 부패는 FDI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Freckleton. et al.(2012)의 연구는 부패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FDI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동일한데 그 효과가 후진국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부패의 감소는 FDI를 증가시켜서 경제성장을 높이는 역할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밖에도 부패가 물적 투자 외에 교육이나 인적 투자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 Coupet(2003)는 부패가 인적자원 개발이나 교육투자를 줄이고 그 결과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 지출이나 교육투자 지출의 경우 지대추구의 가능성이 낮는데 비해서 방위산업이나 토목 공사와 같은 공공지출은 지대추구의 가능성도 높고 정치인에게는 과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부패가 높을수록 투자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DiPietro and Flint, 2012)

3)부패와 무역개방

무역과 부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Tullock(1967)의 고전적인 논문이 있다. 기업들이 정부 로비를 통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패 관련 연구들은 일찍부터 무역과 시장개방에 주목하고 있다.

Abe and Wilson(2008)의 연구에 의하면 APEC 국가들의 부패가 감소하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무역비용이 감소하여 무역이 증가하고 특히 베트남, 태국, 러시아,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의 GDP가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부패는 서로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시장개방이 글로벌스탠다드의 도입을 통하여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Dutt, 2005)과 반대로 제도적 장치나 통치조직의 개선을 통하여 부패가 줄어들면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두 가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부패가 시장개방이나 자유무역을 방해하여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다.(Horsewood and Voicu, 2012)

최근 Dutt and Traca(2010)는 수입국의 세관관리가 부패했을 때 관세 외에 뇌물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패가 무역업자의 이익을 착취(extortion)하여 무역을 방해하지만 수량할당이 엄격하거나 관세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뇌물은 반대로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 즉 조세회피(evasion)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역업자의 이익을 높이고 무역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세의 세율이 25-30% 이상이 되면 탈세 형식의 부패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거래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무역장벽이 낮을 때는 부패가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반대로 무역장벽이 높을 경우에는 장벽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부패와 경제성장의 다른 경로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직관이지만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시되어 왔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는 도움의 손길(helping hand)이나 윤활유(greasing oil)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efficiency enhancing hypothesis)은 경제학의 영역보다 정치학의 영역에서 먼저 되기 제되었다.(Leff 1964, Huntington 1968)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의 억압적인 규제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가 이용된다면 부패가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즉 정치제도가 안정되지 않았거나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부패가 더 나쁜 제도나 정책을 피하기 위한 덜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패와 경제성장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나 규제를 제거하여 최선의 상태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선의 상황으로 부패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칠레와 브라질이 동일하게 가격통제와 생산량 조절을 했을 때 관료의 부패로 규제가 지켜지지 않았던 브라질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현상이 있었지만 칠레에서는 엄격한 정치체제로 통제가 잘 유지되어서 오히려 경제가 침체를 겪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부패가 관료들의 비효율이나 무산안일을 초래하는 관료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급행료(speed money)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간 다른 맥락에서 부패가 정부서비스를 얻기 위한 경쟁을 초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생산에서는 생산비가 낮은 기업이 생산을 담당하고 소비에서는 효용이 높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행위이다. 정부 서비스를 배분할 때 먼저 요구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대기자 모형(queue model)이나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매모형(auction model)은 부패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먼저 줄을 서는 사람이나 뇌물을 통하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서비스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행위라 할 수 있다. (Lui, 1985, Beck and Maher 1986)

뇌물을 싫어하고 정직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있더라도 정부 서비스나 부의 효율적인 배분은 어려운데 개인의 생산자 소비자가 스스로 선호를 표명하고 그 선호의 정도가 뇌물로 표시될 수 있다면 부패는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Shleifer and Vishny 1994)

주로 정치제도나 정부기구가 최선의 상태가 아닐 때 부패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과 달리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외부성을 주고받는 당사자로 보고 이론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런 논지는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리와 동일하다. 즉 정부는 자원배분 과정에서 민간의 선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하고 자원배분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의 효율성 향상 가능성에 대한 비판들도 만만치 않다. Aidt(2003)는 부패가 성장을 방해하는 모래(sander)도 될 수 있고 성장을 촉진하는 윤활유(greaser)도 될 수 있지만 윤활유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정부 실패가 사전에 존재해야 하는데 이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이미 비효율이 존재하고 정부나 관료가 뇌물을 받기는 하지만 공공재의 공급이나 시장규제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제한적으로 부패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료나 정치인이 성실하게 공공재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하거나 뇌물 극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부패를 감추기 위한 낭비적인 노력이 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 민간의 선호 표명에 필요한 경매수입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왜 정치인이나 관료의 수중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특히 급행료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경제학자 뮈르달(G. Myrdal)은 급행료가 오히려 추가적인 급행료를 야기하기 때문에 일을 더디게 만들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보기로 꼽고 있다. 한편 Kaufman and Wei(1999)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여 부패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실증분석에서도 부패의 윤활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Meon and Weill(2010)은 사회제도가 비효율적인 곳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도움의 손길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단순히 부패와 경제성장 자체를 검토하기보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부패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높은 현상 이른바 아시아적 모순(Asian paradox)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부패가 있더라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Li and Wu 2010) 즉 신뢰가 있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파괴적(predatory)이지 않고 때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부패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있다면 부패의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경제학의 학문적 논의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대부분은 정부의 규제나 공공재 공급에서 사전적으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IV. 부패와 경제성장의 실증 분석

1. 실증 분석 모형의 한계

이론적으로는 부패가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주제이만 연구문헌들의 양적

인 면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국가별 지역별로 실증분석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이 분명하지 않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부패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가(corruption is a sand to wheel) 이라는 주장과 반대로 부패가 경제성장의 윤활유가 된다는 주장(corruption is a grease to economic growth)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실증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부패가 투자, 정부지출, 교육, 시장개방, 제도개선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거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론적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실증분석의 결과들도 대체로 부패와 경제성장 간에 역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많지만 대상지역, 연구자의 성향, 발표 지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가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통계분석 기법상의 문제, 이용하는 자료의 문제 그리고 상정하고 있는 모형의 차이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실증 연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한 두 개의 최신 논문이 있지만 두 논문 다 부패가 확정적으로 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Campos et. al. 2010, Ugur and Dasgupta, 2011)

두 연구 모두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하여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자료의 문제점과 부패와 경제성장 간에 존재하는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lity)의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부패와 경제성장간에는 약하나마 역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편기(bias)가 존재하는데 특히 원조와 관련된 국제기구 소속의 연구보고서나 대상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거나 대상국가가 저소득 국가들이면 역의 상관관계를 크게 보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서 아시아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제성장과 부패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ampos 등의 연구 결과 표

편기의 원인	편기의 방향
연구자의 소속	학교 소속-> 전체효과 축소, 음의 효과 축소 연구소나 기관소속-> 음의 효과 확대
발표지	학술지 : 음의 효과 축소 기관지나 연구보고서 : 음의 효과 확대
분석대상 지역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하면 음의 효과 확대

편기의 원인	편기의 방향
분석대상 변수	무역이나 기구변수를 포함하면 음의효과 축소
분석 방법	고정변수효과를 사용하면 음의 효과 축소

Ugur and Dasgupta(2011)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메타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부패와 경제성장 간에는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부패가 직접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는 작고 주로 정부 재정이나 인적자본 채널을 통하여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저소득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역상관의 문제나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다단계의 자료변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부패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들은 저소득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패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정비를 먼저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결론도 분석 모형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패 지표의 문제점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패의 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부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부패의 계량적인 측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부패인 뇌물로 한정하더라도 뇌물 건수, 뇌물 금액, 뇌물 관련된 사람의 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쉽다 한다. 더구나 한 국가의 부패 정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다양한 분야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런 부패를 합산(aggregation)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흔히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건수나 금액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간접적인 지표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개발되고 이 원리에 따라서 직접 지표를 생산하거나 전문적인 기관에서 만든 지표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 Mauro(1995)의 연구도 Business International 회사가 만든 52개 국가의 기업위험요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부패를 측정하는 부패지수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한 국가의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인식기반 지표(perception-based index)이다. 때로는 개인의 부패 경험을 묻기도 하지만 부패의 속성상 직접 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기반 지표는 많지 않다. 직접 부패에 관해서 질문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다양한 부패 징후에 대한 자료 그리고 부패와 반대되는 사회의 투명함이나 정보 공개 등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패를 측정하는 대리지표(proxy indicator)들이 있다.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식지표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만드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세계은행이 만드는 세계통치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 들어 있는 부패통제지수(Control of Corruption Index)가 있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것은 CPI 이지만 포함된 국가의 수나 전문적인 부패의 분류에서는 CCI가 더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CCI의 작성을 위해서 사소한 부패(petty corruption)와 큰 부패(grand corruption)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의 국가포획(capture of the state), 정부 정책의 신뢰성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되고 있다.((Rohwer, 2009))

이 밖에도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공동으로 기업환경조사를 3-4년 주기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국가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조사를 하여 기업환경과 기업환경성과조사(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를 발표하고 있는데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반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관료들의 부패나 기업이 부패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자료를 생성하기도 한다. (Svensson 2007)

이 밖에도 미국의 PRS 회사가 국가별위험안내(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부패(corruption in government), 법치(rule of law), 관료의 질(bureaucratic quality), 인종 갈등(ethnic tensions), 정부의 계약준수노력(repudiation of contracts by government) 그리고 수용위험(risk of expropriation)의 6개 요소가 들어 있어서 부패 지수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런 부패지수들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에 한계가 있고 국가별 지수의 비교에서도 국민성이나 다른 특성 때문에 지수의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계량분석에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처치를 해야 한다.

V. 요약 및 제언

부패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짧은 역사에 비해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여러 연구 분야 중에서도 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부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이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부패정도가 심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패 발생 메커니즘을 알

아보았고 이어서 부패와 경제성장간에 존재할 수 있는 채널을 살펴보았다. 그리로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밝히는 실증분석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개발도상국에 경제적 지원이나 원조를 하는 국제기구들의 입장에서는 부패가 원조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면 원조나 경제적 지원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대추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관료나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든지 도덕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적절히 설계하고 감시감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한편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것인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론적으로는 부패가 경제성장을 조장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직관적으로 부패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패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인상이 강하다. 정치 제도적으로 비효율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패가 효율성을 방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엄격한 시장통제나 정치제도적인 비효율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패가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한편 실증 분석의 결과도 일반인들의 직관과는 달리 매우 다양하게 분산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실증 분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부패의 정도와 경제성장 단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일단의 연구들은 성장이 높아지면 부패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가설을 제대로 검증하기 쉽지 않다. 이 밖에도 실증 분석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투자, 무역 그리고 제도와 같은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패와 서로 공선성(collinearity)이 높다는 점과 부패를 측정할 적절한 지표가 없다는 점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나 세계은행이 작성하는 지표들은 원래 출발이 부패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경제학의 효용지표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 간 비교가 쉽지 않다. 아울러서 연구자들의 소속이나 연구대상 지역에 따라서 계량분석의 결과에 큰 편기(bias)가 존재하는 것 역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Uger and Dasgupta(2011)가 제안한대로 부패나 부패관련 변인들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경제성장 모형의 개발, 역인과의 문제와 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계량경제기법의 개발이 있어야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Abe, Kazutomo and Wilson, John S (2008) "Governance, corruption, and trade in the Asia Pacific Reg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731. Washington DC: World Bank.
- Ackerman, Rose(2007), "Measuring Private Sector Corruption" , U4 Brief - Bergen: Chr. Michelsen Institute (U4 Brief 2007:5) 5 p. <http://www.u4.no/>
- Aidt, Toke S, Dutta Jayasri, Sena Vania (2008), "Governance regimes, corruption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6(2): 195-220.
- Aidt, Toke S. (2009), "Corrup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ume 25, Issue 2 . 271-291.
- Asiedu, Elizabeth and J. A. Freeman(2009), "The effect of corruption on investment growth: evidence from firms in Latin America, Sub-Saharan Africa, and transition countrie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3(2) 200-214.
- Atuobe, S.(2010), " Assessing the Efficiency and Impact of National Anti-Corruption Institutions in Africa"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division, Economic Commission,
- Bai. et. al(2013), "Does Economic Growth Reduce Corrup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Vietnam", NBER Working Paper No. 19483
- Bardhan, P (1997),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3):1320-1346.
- Blackburn, Keith, G. F. Forgues-Puccio (2009), "Why is corruption less harmful in some countries than in other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72(3): 797-810.
- Bose, N, M Haque, and D. Osborn (2007),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 dis-aggregated analysis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Manchester School*, 75(5), 533-556.
- Campos, Nauro, Dimova, Ralitza, and Ahmad Saleh (2010), "Whither Corruption? A Quantitative Survey of the Literature on Corruption and Growth", CEPR Discussion Paper No. 8140.
- Coupet, E.(2009), *Corruption: An Analysis of Its Effects on Output, Investments and Economic Growth*, VDM Publishing.
- Dreher, Axel and T. Herzfeld(2005), "The Economic Costs of Corruption: A Survey and New Evidence", EconWPA in its series Public Economics with number 0506001.
- Dutt, Pushan and D. Traľa(2010), "Corruption and Bilateral Trade Flows: Extortion or Evasion?", *The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92(4): 843 - 860.
- Horsewood, N and A. M. Voicu (2012), "Does Corruption Hinder Trade for the New EU

- Members?." *Economics: The Open-Access, Open-Assessment E-Journal*, Vol. 6, 2012-47. <http://dx.doi.org/10.5018/economics-ejournal.ja>.
- Heckelman Jac C, Powell Benjamin (2010), "Corruption and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growth".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52(3): 351-378.
- Huntington S.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Jain, Arvind K.(2001), "Corruption: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ume 15, Issue 1, 71-121.
- Kaufmann, D and S, Wei(1999). "Does "Grease Money" Speed Up the Wheels of Commerce?," NBER Working Papers #7093.
- Krueger, Anne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64 (3): 291-303.
- Leff, N.(1964)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8, 8-14.
- Li, S and J. Wu(2007), "Why China Thrives Despite Corruptio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70(3): 24-28.
- Lutz, M. B. and L. Ndikumanaz(2008), "Corruption and Growth: Exploring the Investment Channel",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Seri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Mauro, Paolo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 Mauro, Paolo (2004) The persistence of corruption and slow economic growth. *IMF Staff Papers* 51(1): 1-18.
- M̄on, Pierre-Guillaume, Sekkat Khalid (2005), "Does corruption grease or sand the wheels of growth?." *Public Choice*.122(1/2): 69-97.
- M̄on, P and L Weill (2010), "Is Corruption an Efficient Grease?". *World Development*, 38(3), 244-259.
- Murphy, K. M, A. Shleifer and R. W. Vishny(1993), "Why is rent-seeking so costly to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409-414.
- Nuijten, M. and G. Anders(2009). *Corruption and the Secret of Law: A Leg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Ashgate Publishing.
- Pak, Hung Mo(2001),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9: 66-79.
- Pande, R (2008), "Understanding Political Corruption in Low Income Countries" in T Schultz and J Strauss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
- Pasour, E.C.(1987), "Rent Seeking: Some Conceptual Problems and Implications".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1, No. 1. 123-143.
- Pellegrini Lorenzo, Gerlagh Reyer (2004), "Corruptions effect on growth and its

- transmission channels". *Kyklos* 57(3): 429-456.
- Podobnik, B.(2008), "Influence of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rate and foreign investment". *European Physical Journal* 63(4): 547-550.
- Razafindrakoto, M and F. Roubaud(2010), "Are International Databases on Corruption Reliable? A Comparison of Expert Opinion Surveys and Household Surveys in Sub-Saharan Africa", *World Development*, 38(8): 1057-1069.
- Rohwer, Anja(2009), "Measuring Corruption: A Comparison betwee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nd the World Bank's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CESifo DICE Report,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 vol. 7(3): 42-52.
- Shleifer A and R. Vishny(1994), "Politicians and fir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9, No. 4, 995-1025.
- Springgis, M.(2012), "The Impact of the Host Country Corruption on Inward FDI", *Chinese Business Review*, Vol. 11, No. 1, 144-152.
- Tullock, Gordon (1967),"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5 (3): 224-232.
- Ugur M, Dasgupta N (2011), "Evidence on the economic growth impacts of corruption in low-income countries and beyond: a systematic review". London: EPPI-Centre,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Urta, F-Javier (2007), "Assessing Corruption An analytical review of Corruption measurement and its problems: Perception, Error and Utility", unpublished mimeo.
- Wei Shang-Jin (1999) Corruption in economic development: beneficial grease, minor annoyance, or major obstacl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 2048.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1997),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The World Bank.
- 웹사이트와 신문-
- 조선일보, 2013년 6월 20일
- Corruption on the Agenda, <http://www.cisu.dk/>
- Wallstreet Journal, 2012년 12월 4일
- Worldbank, 2004년 4월 8일 The Costs of Corruption, <http://www.worldbank.org/endofyear2004/corruption.html>

투고일자 : 2013. 11. 12

수정일자 : 2013. 12. 11

게재일자 : 2013. 12. 24

국문초록

경제성장과 부패는 역상관관계가 있는가?-이론적 실증적 검토

김진영(강원대)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부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후진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을 부패로 보고 있다.

부패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지대추구 행위나 본인 대리인의 정보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보면 부패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인적 자본형성, 시장개방, 그리고 정치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런 요인들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최초 경제가 최선의 상태라면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만 시장이 왜곡상태에 있다면 즉 엄격한 시장통제가 있든지 통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뇌물이나 급행료가 시장왜곡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아도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들이 약간 더 우세하지만 연구대상 지역, 발표 학술지의 성격, 연구자의 소속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연구결과는 강건(robust)하지 않다.

부패와 경제성장 간에 존재하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실증연구들이 부딪치는 문제 즉 부패와 경제성장간에 존재하는 인과문제(causality) 그리고 부패와 다른 독립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와 모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부패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현상 연구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오차(error)의 문제 외에 인식지표(perception indicator)로서 객관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부패연구 자체가 국제기구들의 원조 효과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필요에 의한 편기(bias)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앞으로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과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부패, 지대추구, 본인 대리인 모형, 경제성장, 투자